

## 원데이 헌법 기출풀이

<b>시험명</b>	국가직 7급 (헌법 객관식)
<b>시험일</b>	2018. 8. 18.
<b>적중률</b>	100%
<b>미적중</b>	없음

<b>정답표(나책형)</b>
③④②①④/④④②②②/①①③②①/④③①③④

**항상 최신경향을 유지하기 위한 교재 업데이트용입니다  
정답위주로 간략히 해설됩니다**

문제 1번	
<b>정답</b>	③
<b>교재</b>	<p>■ 방송의 자유 성격 : <b>헌재결정</b>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b>객관적</b>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p>
<b>노하우</b>	리딩판례

문제 2번	
<b>정답</b>	④
<b>교재</b>	<p><b>평등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b></p> <p>㉞ <b>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b>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잠정적용 헌불 - 평등원칙 위반(O)) (2018. 1. 25. 2017헌가7)</p> <p>☐ “집행유예보다 중한 <b>실형</b>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 등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b>불합리한 차별</b>을 야기하고 있</p>

	다.” (2017헌가7)
<b>노하우</b>	<p>① 소년범상 위헌은 딱 1개임.</p> <p>② 위 판례는 위판총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듯이, 장기간 군복무를 한 군인이 20년이 지나 뒤늦게 어린 시절 저지른 소년범상 전과가 문제된 사건임.</p>

문제 3번	
<b>정답</b>	②
<b>교재</b>	<b>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0개)</b>
<b>노하우</b>	<p>① 이중처벌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이중과세와는 구별)</p> <p>② 위판총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함과 더불어 문제 푸는 방법을 전달한 바 있음.</p>

문제 4번	
<b>정답</b>	①
<b>교재</b>	<p>■ 처분적 법률(한시법도 포함) : <b>cf</b> ① <b>문화재보호법</b>상 문화재의 은닉 및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의 보수·보관을 처벌(위헌, 기각, 각하 - 헌재 2007.07.26. 2003헌마377(문화국가원리 관련 위헌인 판례 도표 참조), ② <b>보안관찰법</b>상 보호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의무를 부과(합헌 - 헌재 2003.06.27. 2001헌가17), ③ <b>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b>(합헌 - 헌재 2009.02.26. 2007헌바41), ④ <b>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b>(친일재산귀속법 - 진정소급입법 - 합헌 - 헌재 2011.03.31. 2008헌바141 등)</p> <p>→ ①②③④ 처분적 법률X ☐ <b>확실히 알기</b> (나머지는 처분적 법률이) ★</p>
<b>노하우</b>	① 처분적 법률이 아닌 4가지를 반드시 확실히 알기.

문제 5번	
<b>정답</b>	④
<b>교재</b>	<p>■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협익X)</p>
<b>노하우</b>	협익가 아님을 주의!

문제 6번	
정답	④
교재	<b>cf 질의·토론 不要</b> : ①회의의 비공개, ②국회 의사일정의 변경 청구시 의원의 동의, ③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④국회의원의 사직허가여부, ⑤탄핵소추의결
노하우	①원칙적으로 토론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위 5개의 경우를 확실히 암기. ②이와 유사하게 국회 내 투표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기명 투표이나, 헌법개정 절차만 기명투표임을 상기

	<p>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p> <p>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p>
노하우	①헌법 조문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

문제 7번	
정답	④
교재	<b>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13개) 이외 모두 합헌</b>
노하우	①위헌결정례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모두 합헌결정례임. ②낮선 결정례 혹은 처음 본 결정례는 모두 합헌임.

문제 10번	
정답	②
교재	■ <b>인간의 존엄과 가치 최초로 명문화</b> □ <b>행복추구권</b> 구권 규정은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최초 규정
노하우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은 동시대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인식 ②헌정사의 경우 시험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헌정사 도표를 통하여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문제 8번	
정답	②
교재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b>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b> (위헌 -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 한 사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헌재 2016.12.29. 2013헌마142)
노하우	이미 위헌을 받은 사건이므로 당연히 적법요건은 통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함.

문제 11번	
정답	①
교재	<b>경제질서 관련 위헌인 헌법재판소 결정례 (5개) 이외 모두 합헌</b>
노하우	①위헌결정례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모두 합헌결정례임. ②낮선 결정례 혹은 처음 본 결정례는 모두 합헌임.

문제 9번	
정답	②
교재	ㄱ. ■ 침략전쟁의 부인 : <b>헌재결정</b>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외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우리 <b>헌법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b> "(이라크파병 2차결정(사법심사사제설) - 헌재 2004.04.29. 2003헌마814)  ㄴ. 헌법 제64조

문제 12번	
정답	①
교재	■ 헌법의 개정절차(2:6:3) : ㉠'제안' (대통령(국무회의 심의) or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 ㉡대통령의 '공고' (②0일 이상) → ㉢국회'의결' (공고된 날로부터 ⑥0일 이내(↔공고기간 경과 후), 국회재적 2/3 이상 찬성, ' <b>기명'투표</b> (□헌법상 등장 1번-원칙은 무기명투표), 공고제도에 반하므로 수정의결 不可) → ㉣'국민투표'로 확정(국회의결 후 ③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X)) → ㉤'공포'(즉시 공포) → ㉥

	발효(발효시기는 명문규정無 - '공포시설'과 '20 일경과설'의 대립. 현행헌법은 부칙에서 발효시기를 별도 규정(부칙§1))
노하우	①헌법 개정절차는 빈출됨. ②반드시 2.6.3의 절차를 정리할 것!

문제 13번	
정답	③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5개)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위헌결정례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모두 합헌결정례임. ②낮선 결정례 혹은 처음 본 결정례는 모두 합헌임.

문제 14번	
정답	②
교재	<p>■ 재판의 전제성 X : <u>'승소' or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경과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근거 규정(원칙)</u></p> <p>■ <b>현재결정</b>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b>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소송이 종료되었다</b>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헌재 1993.12.23. 93헌가2) <b>주의 '처음'에는 반드시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한다!</b></p>
노하우	기출문제는 직렬 무관 들고 둡니다. 따끈따끈한 2018년 법원직 기출지문이 그대로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5번	
정답	①
교재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多) 이외 모두 합헌
노하우	①위헌결정례만 확실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모두 합헌결정례임. ②낮선 결정례 혹은 처음 본 결정례는 모두 합헌임.

문제 16번	
정답	④
교재	모두 옳음
노하우	리딩판례 or 지문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생각해보기.

문제 17번	
정답	③
교재	<p><b>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b> -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위헌' 및 '잠정적용 헌불' - 선거권을 침해(O), 보통선거원칙 위배(O), 평등권 침해(O)) <b>주의 '집행유예자' → 위헌, '수형자' → 잠정적용 헌불</b> (헌재 2014.01.28. 2012헌마409)</p> <p><b>반대결정례 선거법</b>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b>합헌</b> - 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p>
노하우	위헌결정례와 반대결정례는 확실하게 정리해봐야 함.

문제 18번	
정답	①
교재	<p>■ <b>현재결정</b> "<u>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u>" → '<b>신임국민투표</b>'와 '<b>정책과 연계한 신임국민투표</b>' 모두 허용 X</p>
노하우	지문 후단만 보고 틀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 헌법은 특히 함정이 많으므로 진단과 후단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함!

문제 19번	
정답	③
교재	헌법재판과 직무대행 순서 ■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헌재법 §12④) ■ 일시적인 사고 → <b>임명일자순</b> (규칙 §2) ■ 결위 or 1월이상 사고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규칙 §3)
노하우	직무대행 정리는 매우 중요함!

문제 20번	
정답	④
교재	■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b>중앙당</b> 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 <b>당대표경선</b> )사무 중 <b>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b> 의 관리를 <b>중앙선거관리위원회</b> 에 위탁할 수 있고,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b>정당</b> (국가(X))이 부담한다(정당법 §48의2)
노하우	당대표경선사무(정당부담)와 당내경선사무(국가부담)를 구분!!